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매우 영국적인 쿠데타’

흥미진진하고 급박하게 전개된다. 노동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은, 아아, 지금은 아스라한 향수가 된 과거 당내 좌파가 주장하던 단골 메뉴들, 곧 유럽 공동시장 탈퇴, 연금과 보험기금을 포함한 금융의 국유화, 상원 철폐, 서작 명단(honours list)과 사립학교 폐지, 그리고 무엇보다 NATO 탈퇴와 모든 외국 주둔군의 철수, 영국의 일방적 비핵화 같은 것들이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

“오늘 밤 우리가 얻은 것은 정치권력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영국의 진정한 권력은 의회가 아니라 금융권의 중역 회의실, 관료들의 아담고 후미진 방, 주요 일간지의 편집실에 있다. 이것들이 야말로 이 나라 모든 중요한 제도들의 숨통을 조이는 지배 계급의 본산이다.” 개표 막바지에 집권이 확실시되자, 노동당 당수로서 곧 총리가 될 소설 속 인물 해리 퍼킨스가 측근들에게 했던 말이다.

소설은 좌파 정권 비토를 위한 영국 정보기관과 언론 및 종교계, 정부 요소마다 포진한 보수적 관리들, 그리고 미국 정부까지 연결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음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가 영국을 파탄 낼 듯이 언론이 범석을 띠는 가운데, 정책과 무관한 총리와 각료들의 사생활 뒷조사기 날날이 이뤄지면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삶으로 채색되면서, 정권의 도덕성과 권위 자체가 의심받을 상황을 맞

는다. 급기야 납치되다시피 폐쇄 병동으로 옮겨진 총리는 ‘건강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영국 민주주의 사상 최초의 명실상부한 진보적 실험은 막을 내린다. 이 소설은 원래 대저 정부 시절 처음 선보였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현 매이 보수당 정권의 실책이 거듭되고 노동당의 급진 정치인 제라미 코빈 당수의 집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자가 새 서문을 덧붙여 재출간한 것이다. 이 소설을 읽고 현 문재인 정권이 겪거나 겪을 협력을 떠올린다면 이는 지나친 비약일지 모른다. 문 정권의 개혁 어젠다가 소설과 현실에서 영국노동당이 내세운 개혁 과제들과 그 진보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실은 현 정권의 행태에서 쿠데타 진보라 이를 불일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루어지기 때문이다.

청산 없이 개혁 없다

민주주의 모국이라는 영국에서조차 위의 소설적 상상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기득권 구조와 관행이 엄연한데, 이제 겨우 이행 단계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어느 수준의 개혁을 감내할 수 있을지, 혹은 과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개혁이 애초에 가능하거나 한 것인지, 아득해진다. 모든 청산이 그렇듯, 적폐 청산이란 성공해 봐야 기껏 본전치기, 그 자체가 정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 개혁은 누적된 과오를 바로잡는 데서 비로소 정당성 혹은 권위를 획득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 적폐 위에 조성된 광범위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 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노릇이다. 요컨대 개혁은 청산을 포괄하는 작업이 돼야 마땅하거나, 청산 없는 개혁이란 일종의 모순 어법(oxyoron)으로서 애초에 불가능한 개념인 것이다.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적폐의 적나라한 실상을 접하면서, 피로감 혹은 정치 보복 운운하며 지레 발목을 잡는 일이 난감하고 딱 하도,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바 아니지만, 그럴수록 청산의 당위성과 명분은 배가(倍加)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청산을 포함한 개혁의 과정은 언제나 공적 가치에 세밀하게 부합하고 전술은 엄중하고 치밀하되,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에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다수를 ‘위한’ 정치이기 때문이지 다수가 늘 옳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은 위대하다는 말처럼 공허한 말은 없거나, 이는 여론에 아부하려는 정치인들의 상투적 수사이기 십상이다. 전후 영국 노동당 좌파의 거물이었던 나이 베버는 “정치야 여론 추이만 좇는다면 정치에서 시적 감흥(poetry)을 탈취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치를 종종 ‘아트’(art)라 하지 않는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끌고 당기는 정치력과 정교한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이다.

NGO칼럼



임 광 목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 학대 예방, 국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때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실은 어떨까?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36%의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다. 하지만 신고 건수 증가율에 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및 현실성 있는 인력의 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상담원들은 급증하는 현장 조사 업무에도 대응하기 벅한 실정이다. 2016년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 인원은 1181명인 것에 반해 실제 배치 인원은 637명으로 적정인원 대비 54% 정도의 인력만이 현장에 배치된 상황이다. 국내이 베스의 연구(2015년)에서도 상담원 1인당 연간 평균 54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당 12건의 사례기준을 제시하는 미국 아동복지연맹 기준보다 4.5배나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접근성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을 3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다. 이는 현장 출동과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현장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 행위자에 의한 신변 위협과 폭언, 폭력도 비밀비재하여 상담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현장 출동과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는 여전히 급증하고,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아 담당하는 사례 수 또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지는 사회적 인위적 속에서 아동들의 안전과 가족 보존의 가치를 수행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을 바라볼 때 국가의 구명 난 아동 보호 체계를 상담원들의 희생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그동안 아동 학대 관련 대책이 없었을까? 사실은 넘쳐났다. 아동 학대 사망 사

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정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확대를 비롯한 상담원 수 증원, 관련 예산 확대 등 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막상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 정책 집행의 우선 순위에서 뒤쳐졌다. 즉, 대책만 있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말잔치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도는 재정 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동 학대 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 국비 매칭 금액과 별도로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 또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제시했다. 이제부터라도 분절된 정책이 아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아동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보호 체계는 국가의 책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社說

전남 지역 청년 태반이 떠나고 싶어 한다니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전남 지역에서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나마 남아 있는 청장년층의 태반이 이주 계획을 갖고 있다니 충격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수입이 변변치 않아 살길이 팍팍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 떠날 생각이 앞서는 것도 당연하겠다. 전남도가 지난해 9월 표본가구로 1만 9152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2017 전남 사회조사’ 결과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미만 젊은 층은 10명 가운데 6명(57.4%) 정도가 ‘이주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30~39세도 절반 가량이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전남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는 뒤떨어진 교육환경과 부족한 직장·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19세 청소년들의 경우 미래 일자

리 부족(43.5%)과 문화·편의시설 향유(16.9%)를 이주하고 싶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남 주민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 27가구 중 17가구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가구도 27.8%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8명은 공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4명 이상이 영화조차 못 본 것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도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청년 고용 지역 할당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환경과 부족한 직장·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19세 청소년들의 경우 미래 일자

국회 개헌 논의 더 이상 미적거리선 안 된다

지난 1년 동안 개헌·정개혁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위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할 경우 결다리 투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당은 어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철수 대표는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필수라며 청와대 주도 개헌을 경계하면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치권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헌의 틀로 들어 가면 여야는 정부형태나 선거구제 개

편 등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세계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바깥에서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지방 분권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터할 수 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나는 밥은 한 끼 굶어도 되었지만 보고 싶은 영화는 굶지(?) 않았다.” 김용택 시인은 ‘춘봄, 김용택 극장에 가다’라는 제목의 영화 에세이집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많은 영화와 영화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인은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희망과 절망, 끝없는 욕망과 순간의 좌절, 슬픔과 기쁨, 눈물과 환희, 기다림과 그리움과 간절함과 사랑의 미련과 아련함 등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것을 영화는 우리 코앞에다 펼쳐 놓는다...”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한국영화 결산’ 자료에 따르면 그해 전체 영화 산업 매출은 2조2730억 원,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1억1655만 명(관객 점유율 53.7%)이었다. 특히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아이슬란드 4.22회, 싱가포르 3.93회, 호주·홍콩 3.65회, 미국 3.64회와 비교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국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 혜택을 누리려는 것은

아니다. 1980~1990년대에 적자 운영으로 극장 문을 닫은 지역이 많았고 여전히 아예 극장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많은 영화와 영화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인은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희망과 절망, 끝없는 욕망과 순간의 좌절, 슬픔과 기쁨, 눈물과 환희, 기다림과 그리움과 간절함과 사랑의 미련과 아련함 등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것을 영화는 우리 코앞에다 펼쳐 놓는다...”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한국영화 결산’ 자료에 따르면 그해 전체 영화 산업 매출은 2조2730억 원,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1억1655만 명(관객 점유율 53.7%)이었다. 특히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아이슬란드 4.22회, 싱가포르 3.93회, 호주·홍콩 3.65회, 미국 3.64회와 비교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국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 혜택을 누리려는 것은

작은 영화관

관한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의 문화 감증을 풀어 주는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100석이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최신 영화들을 상영하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다. 최근 장흥 ‘정남진시네마’를 찾았을 때 ‘신과 함께-죄와 벌’은 전 좌석 매진 상태였다. 한 주민은 목포나 광주로 ‘월정 관람’을 다녀야 했던 불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작은 영화관’과 같은 소규모 문화시설들이 도내 곳곳에 들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났으면 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 고

87학번과 87년생 공직자가 함께 본 영화 ‘1987’

개인적으로는 여러 등장인물 중 가슴 깊이 다가온 인물은 박종철 군의 아버지다. 아들의 유해를 강제로 화장한 후 차디 찬 임진강 겨울 강물에 띄워 보내며 그동안 꼭꼭 잡아왔던 울음을 터트리며 오열하는 아버지, “잘 가그래이! 철야! 아버지는 아무 할말이 없데이!” 나도 같이 따라 울었다. 이렇게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떠나 보내는 길이 결코 편치 않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시 장남과 함께 앉아 있던 안성례 선생님은 영화 보는 내내 소리없이 우셨다. 국가 권력 앞에 맨손으로 맞섰던 빼어난 역사를 온몸으로 체화하며 사셨던 분이라 영화 장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셨을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든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타자를 타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한마디로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이 감춰질 뻔 했다. 하지만, 물고문 질식사를 단순 쇼크 사망 사건으로 감싸려는 무지 막대한 권력 앞에 정의로운 검사, 의사, 기

자, 검사관, 교도관 등 진실을 밝혀내려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연희’와 같은 보통사람들도 있었다. 지난 역사를 돌아켜보면, 사실 역사를 바꾼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시민들이 주먹밥과 생수를 나르며 내 가족, 이웃, 친구를 지켜냈던 5·18민주화운동이 그러했고, 87년 6월 항쟁이 그러했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 주권혁명도 평범한 국민의 피 흘리지 않는 위대한 혁명이었다. 비똤어지고 어긋난 세상은 그렇게 국민의 힘에 의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었을 때, 한편에서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고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 분명 있었다. 그러나 그 촛불은 부정부패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상식이 통하고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향한 것 같았으며, 차디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은 결국 새로운 시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 우리 시는 그 촛불 민심을 맹주 안으로 가져와 촛불 행정을 펼쳤다. 행정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때문 아프기도 하고, 때문 같이 눈물도 흘리고, 때문 뜨거운 감동으로 함께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늘 고된 투쟁, 투철한 공직 정신은 무엇 일까. 그 고된 투쟁 속에서도 이어졌다. 정의로운 선배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끝까지 소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았다. 영화가 끝난 후 함께 영화를 본 동료와 차 한잔 하면서 여러 생각을 나눴다. 결론은 ‘1987’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정의의 역사를 지켜내고 계승하기 위해 국민은 늘 깨어있으며, 여전히 촛불 민심은 민생의 현장에서 뜨겁게 타고 있다. 이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며 정진하려는 나를 만들어낼 것이며, 공직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이번 영화 관람이 단순한 선·후배 공직자 간의 문화 향유를 넘어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여운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아울러 ‘광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공직자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도 해본다.



임 병 두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5·18보상 담당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새해에 인사까지 겹쳐 업무보고 등 정신없이 두 주를 보내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 때마침 윤장현 시장님, 그리고 동료와 영화 ‘1987’을 볼 기회가 생겼다. 연초부터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되어 흥행 질주 중인 영화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시기가 꼭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영화다. 무엇보다 그해 대학 신입생이었던 87학번들, 그리고 그해 태어난 87년생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기대가 컸다. 각각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 영화를 보며 무엇을 느끼지 무척 궁금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